

배포일시	2021. 9. 9.(목)	총 2쪽 / 사진 없음	
보도일시	배포 즉시 사용 가능	담당부서	기획조정실 기획팀
담당실장	홍영오 기획조정실장 02) 3460-9288	담당자	장다혜 기획팀장 02) 3460-5198

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한 “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” 연구과제 보고서에 관한 “국책연구원마저 文 부동산정책 비판” 식의 제목과 내용의 언론기사 및 사설과 관련하여,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해당 연구의 목적 및 내용에 맞지 않는 언론 보도의 문제

- 본 연구원이 주관한 <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> 연구보고서의 내용과 결론과 관련하여 2021년 9월 6일자 세계일보 관련 기사를 포함한 30여개의 관련 기사 및 사설에 대해, 해당 연구의 주된 목적과 내용보다는 결론 부분의 일부 내용과 표현을 지속적으로 인용 및 재인용하여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시함.
- 2021년 9월 6일 이후 관련 언론보도에서는 해당 보고서가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이 현 정부 부동산정책에 있다고 진단하고 결론을 내린 것처럼 독자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보도하고 있음
 - ▶ 그러나, 해당 연구는 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과 부동산정책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전반적·종합적으로 점검·분석한 것으로,
 - ▶ 특히 부동산 형사정책 분야에서는 현재 부동산 정책상 한계의 원인이 특정 정부의 부동산 정책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, 이전 정부부터 누적되어 온 공공부문의 총체적·구조적 부패를 주된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으며,
 - ▶ 이에 정부가 규제·과세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실시한다고 해서 현재 부동산 문제를 타개할 수 없으므로,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인 공공부문의 구조적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근본적·개혁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있음

을 강조하고 있음

- ▶ 또한,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관련 언론보도에서 이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진단에 관한 것에 한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어, 해당 보고서의 목적과 내용이 독자들에게 잘못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바임

2. <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>의 주요 내용

- (취지 및 목적) 본 연구는 국가 위기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개혁과제를 추진해온 현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움직임을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할 경우 정부가 추진해온 모든 개혁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에 직면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서 추진되었고, 부동산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
- (주된 내용)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과 부동산정책을 전반적·종합적으로 점검·분석하고 있음
 - ▶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하여
 - ① 부동산 공기업 및 이와 공생하는 민간기업·펀드 등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,
 - ② 연기금, 재벌, 외국자본(또는 외국기업) 등 거대자본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,
 - ③ 금융권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,
 - ④ 정부의 다주택자 종과세 정책의 혼선에 따른 시장교란 가능성,
 - ⑤ 공공임대주택사업 참여 민간사업자 등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,
 - ⑥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등 공적 정보를 악용·남용한 시장교란 가능성,
 - ⑦ 부패정치인 또는 부패관료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,
 - ⑧ 부패 및 자금세탁 방지시스템 미비에 따른 시장교란 방지 가능성 등을 전 방위적으로 점검하고 있음